

“목표는 정권교체” 박지원 ‘정치 올인’

1년 임기 원내대표 도전 강행 배경 관심 증폭

승패따라 당내 위상·대선정국 영향력 갈릴듯

친노 지원 과반득표 여부 속 후보단일화 변수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물론 민주통합당 내부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번 도전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정치적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전 강행 배경=당초 박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보다는 당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박 최고위원이 이미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한 차례 지낸 바 있는데다 임기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친노 그룹의 수장인 이해찬 당선자와의 연대를 통해 갑작스레 원내대표 출마에 나섰다.

‘담임’, ‘당내 권리나눠먹기’, ‘짜통 DJP’ 등 당내의 반발에는 ‘정권교체’를 위한 최적의 카드라는 평분으로 맞서고 있다. 친노 그룹(이해찬)과 비노 그룹(박지원)의 화합을 통해 대선

을 앞두고 당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경륜 등을 토대로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도전 강행 배경에는 나이(70)와 시기(대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 측근은 “박 최고위원이 단순히 1년 임기의 원내대표 하려고 당내 비판을 무릅쓰고 출마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쓰아 부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노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경선 패배는 박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저명성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명분에서 밀리는 도전을 행했다는 점에서 좀처럼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은 물론 당내에서도 말벌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박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지난 통합 과정과

지도부 경선에서 상처를 입었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선 정국을 진두지휘하는 킹-메이커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호남 정치권 수장의 위치를 넘어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선 패배는 박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저명성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명분에서 밀리는 도전을 행했다는 점에서 좀처럼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은 물론 당내에서도 말벌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적 명분=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박 최고위원의 정치적 명암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박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지난 통합 과정과

받고 있는 박 최고위원이 타 후보들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64표) 여부가 관건이다.

박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당선자 127명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 원내대표로 직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등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선자 등 친노 그룹이 25명 인파, 박 최고위원 지지 그룹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달인인 이 당선자와 박 최고위원이 막판 표 단속에 나서면서 60표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선 구도는 복잡해진다. 누가 2위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텔락 후보들의 표를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후보단일화도 변수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전병헌, 유인태 의원은 이미 후보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지지 의원들의 단일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박지원-이해찬 조합에 불편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입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동경기자 tuim@kwangju.co.kr

“국민경선 도입 원포인트 회담 갖자”

문성근, 국민경선 반대 박근혜에 제안

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2002년에도 국민참여경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탈당한 분 아니냐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완전국민경선) 안 하겠다는 건 이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법과 제도를 국민여론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게 정치인의 을바른 태도”라며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도 예전의 제도를 금과 옥조로 블들고 있다면 시대에 뛰어들

국민참여경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탈당한 분 아니냐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완전국민경선) 안 하겠다는 건 이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법과 제도를 국민여론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게 정치인의 을바른 태도”라며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도 예전의 제도를 금과 옥조로 블들고 있다면 시대에 뛰어들

진 정치인”이라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국민경선이므로 안 원장에게 불리할 게 없다”면서도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단일화를 요구하면 500만 국민께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대행은 지난 28일 “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드시 완전국민경선으로 출설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하면 500만 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참가자들의 권역과 연령별로도 각각 다른 것은 정치 자제자기보다 위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전히 박 위원장은 “국민경선은 100% 국민경선이므로 안 원장에게 불리할 게 없다”면서도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단일화를 요구하면 500만 국민께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대행은 지난 28일 “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드시 완전국민경선으로 출설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하면 500만 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참가자들의 권역과 연령별로도 각각 다른 것은 정치 자제자기보다 위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대권주자들 잇단 ‘호남행’

박근혜·정동준·이재오 지역 민심잡기 행보 본격화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 구애’를 본격화하고 있다. 불모지나 다른 없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선 연말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광주·전남 총선공약실천본부 발족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현장과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도 직접 찾을 계획이다. 박 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강원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충청권(25일), 경기·인천(26일), 부산·경남(27일)을 각각 방문했다.

새누리당 정동준 전 대표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자리에서 전국 민생 탐방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번 전국 투어의 주제를 확정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호남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호남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